

# 美,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간첩 색출” vs “모욕적 발언”

##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野 “대통령실, NSC 유출 전면 부인 휴민트 정보, 교감청 통한 것으로 둔갑”  
조태용 “불송치 결정서, 영문 모르는 말”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 유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군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

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단정”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野, ‘유병호 소환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野 “유 사무총장, 고의적 수사 지연”  
김진욱 처장 “법 허용한 수단 사용”

野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지고 사퇴”  
與 “과거 동이족… 문제 해결 안 돼”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용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 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

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

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 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용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쳤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용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 민주당, 이재명 중심 총선 모드… 非명 “본선 경쟁력 키워야”

## 김은경 혁신위, 하위 평가자 감산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

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률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비이재명계인 조용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그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尹대통령 “부정부패·가짜뉴스 추방하자”

##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

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며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이 수해를 비롯해 산사태·산불 현장,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에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이 추진 중인 가짜뉴스 추방 운동을 격려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